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손질 경제성장률·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교육교부금 개편

교육부·기획처, 새로운 산식 논의
내년도 교부금 80조~100조 추산
교육재정 보장 수준 등 막판 진통

54년간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이 폐지·개편되는 방향으로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교육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연동 방식 개편에는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교육재정 보장 수준과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당초 이번 주로 거론됐던 개편안 발표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18일 정부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대신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교육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내국세 연동 구조는 1972년 도입됐으며 당시 11.8%였던 교부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20년부터 20.79%가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안정적인 초·중등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기획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수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며 개편을 요구해 왔다.

최근 협의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 교육부도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처도 지난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반적인 개편 방향에 합의했다”며 “현재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새 산식이 도입되면 교부금 증가 폭은 현행 방식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산식을 적용할 경우 내년도 교육교부금이 80조원 안팎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경우에는 100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어 두 방식 간 격차가 약 2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다.

막판 협상의 핵심은 내국세 연동을 끊은 뒤 교육재정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지다. 교육부는 연동 방식을 개편하더라도 현행 20.79%를 적용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처는 이를 보장할 경우 사실상 기존 연동 구조를 유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도 쟁점이다. 기획처는 기금

내 ‘인재·교육계정’을 만들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교원·학부모·학생·시민사회 등 353개 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8월 국무회의 개편안 상정 중단과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철학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유지와 시설 안전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고정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정부에서 교육감들을 불러 자세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굉장히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교육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없었다”고 말했다.

두 부처의 막판 조율이 이어지면서 개편안 발표 시점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 교육감은 “두 부처 간 입장 차이가 크다”며 “이번 주에는 결정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로부터 19일 오전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후 발표가 연기됐다는 설명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화성 매항리평화기념관.

/경기도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 7곳 신규 인증

화성 매항리평화기념관 등 선정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화성 매항리 평화기념관 등 도내 관광지 7곳을 ‘2026년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로 신규 인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증된 15곳을 포함해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는 모두 22곳으로 늘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웰니스 관광 지문위원회’를 열고 10개 시군 후보지 14곳을 대상으로 최종 심의를 진행한 결과 화성 매항리평화기념관, 용인 법륜사, 하남 아쿠아필드, 양주 가나아트파크, 여주 목야박물관·황학산수목원, 양평 웰스투어센터 등 7곳을 신규 인증했다고 밝혔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과 건강 또는 행복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을 결합한 개념으로,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도는 신규 인증 관광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맞춤형 자료와 역량 강화 교육, 국내외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태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새롭게 인증된 관광지들이 경기도 웰니스 관광의 매력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관광지의 특색를 살린 콘텐츠를 강화해 국내외 관광객이 경기도에서 머물며 휴식과 치유를 경험하고, 관광객 유입과 체류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교육청, 학교 시설개선 사업 검증받는다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추진할 학교 시설개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 검증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시설 노후도와 개선 필요성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까지 확인해 예산이 시급한 학교부터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96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7~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증단은 올해 상반기 실시한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선정된 시설 물량과 노후도 등 배점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학교장과 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도 듣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학교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시설 개선이 시급한 학교에 예산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장검증 결과는 2027~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9월 우선순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해 공개하고, 해당 순서에 따라 2027년부터 사업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최대 40만원

사업 참여자 모집… 31일까지 접수
거래액·중위소득 등 요건 충족해야

서울에서 최근 집을 옮긴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 인원은 최소 4000명.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세전 월 소득은 약 384만7000원 수준이다.

지원금은 실제 지출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범위에서 생애 1회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된다. 중개보수나 이사비 가운데 한 항목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청.

/메트로신문 DB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모집부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제대군인의 신청 가능 연령이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늘어난다.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년, 2년 이상이면 3년을 연장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도 줄었다. 신청자가 행정정

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5종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 3종으로 줄었다.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은 우선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안심주택 피해 입차인과 청년부상제대군인도 하반기 우선지원대상으로 지원한다.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청년도 우선 선정 대상이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넘으면 우선지원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뒤 소득이 낮은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정한다.

서울시는 서류심사와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이의신청과 서류 보완 절차를 거쳐 12월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韓투자 이행속도에 트럼프 불만… 한미훈련 축소 배경
▲ 7.7 강진 후 여진 1600차례… 공포에 질린 인니 플로레스섬

/사진 뉴스스

▲ 지난해 인도주의 활동가 350명 숨져… 월드비전 “보호 강화해야”
▲ 우크라, 하룻밤 드론 800대 맹폭… 러시아 총선 앞두고 전쟁 격화

▲ AI에 기업 업무 학습시키려… 구글, 파산한 美 항공사 데이터 인수
▲ 트럼프 지지율 33%로 취임후 최저… 64% 국정 불만